신사참배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

박태영*

Ⅰ.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의 종교성 검토
Ⅱ.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조선교회의 대응
Ⅲ. 신사참배의 결과 -조선교회 정치에 예속되다

머리글

조선교회는 1930년대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하여 혹독한 시련을 겪고 곤욕을 당하였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은 옥고를 치루었고, 여러 지도적인 신앙의 인물들이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였다. 그러나 조선교회 전체를 보면, 교회들이 일제의 핍박에 굴종하여 교단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고, 각 교단의 임원이며 대표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다. 이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신사참배의 종교적인 성격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는 행위는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배교의 행위라고 여겼다. 그래서 고난을 무릅쓰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며,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일제 당국자들이 주장한바 대로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여겼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신사 참배의 종교성 여부를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밝히는 것은 신사 참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사참배의 종교적 성격을 밝힐 것이며, 일본정부가 신사참배 강요를 통해서 조선의 교회를 어떻게 일본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 가며, 또한 이용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의 종교의 자유가 탄압을 받게 되었는지 또한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크게 훼손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일본정부에 있어서 1931년 민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체제시대에 가장 절실했던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조선인들의 순종과 적극적인 협조였다. 조선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시키고 조선 땅에서 전쟁 물자를 동원하는 일이 필수 요소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신사참배를 총동원체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는 신도라는 종교를 이용하여 일반국민을 통제하고 동원체제에 수월성을 기하려 하였고, 또한 조선의 기독교를 통제하고 더나가서는 기독교 제거 내지는 무력화정책에 효율성을 꾀하려 하였던 것이다.

일본정부의 총독부에 의한 조선 내 기독교 세력의 거세 혹은 무력화 정책,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선 내 기독교의 '일본적 전향'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첫 단계가 미션계 학교에 대한 탄압과 그를 통한 구미선교사들의 교육으로부터의 추방이었고, 둘째 단계가 교회의 일본화 즉 황국신민화정책이었다. 이 두 단계에서 총독부가 동원한 수단이 바로 신사참배 강요였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얻은 것은 첫째가 구미선교사들의 자신퇴거 또는 추방이었으며 둘째는 한국교회의 무한정의 타락이었다.[1]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 것은

1) 손정목, 「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정책연구」, 『한국사 연구』, 제58호, 1998, 138쪽.

첫째, 조선인의 정신을 개조하여 일본 국민화 하려는 의도요, 둘째, 조선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독립의 의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셋째로, 조선의 기독교 조직과 기독교 학교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려는 의도와 더 나가서는 기독교의 말살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이후에 일본의 조선통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여겼던 것은 한국인의 '민족적 자각심'[2] 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민족적 자각심이 강한 집단이 기독교이며, 애국 계몽사상과 국권회복 운동의 온상[3]의 역할을 해 온 집단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조선인민에게서 민족정신을 없애고, 기독교 집단을 무력화하고 더 나가서는 교회를 일본정부의 선전도구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된 것이다.[4]

Ⅰ.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의 종교성 검토

신사참배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확인해야 점은 일제가 강요했던 그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행위인가, 또는 단순히 국가의례인가 하는 점이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집요하고 강압적인 황민화 정책으로 한국민족 자체가 말살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국교회 역시 기독교 순수 신앙이 왜곡되고 박해받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시기에 한국 교회

2) 渡部學, 阿部洋 編,『日本植民地教育資料集成』第69卷, (東京: 龍溪書舍,1991), 김승태 편,『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기독교편,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소, 1996, 1910-1945년, 40쪽.

3) Arthur Judson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pp568-570.

4) G. T. Brown, *Mission to Korea*, Board World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 1962, 157쪽.

는 두 가지 상반된 행동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거나 편승해서 저지른 친일·부일 행각과 민족정신과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행적이 그것이다.[5] 그런데 여기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국가 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신도는 종교이고, 따라서 신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배교행위라고 생각하고 온갖 수난과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정부가 강압적으로 시행한 신사참배가 과연 국민의례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인가? 라는 점을 분명히 규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 우리는 먼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에 과연 종교성이 있는가를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본다. 일본과 한국에서 다년간 신사행정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신기사(神祇史)를 연구하여 신도 및 신사에 정통한 오야마(小山文雄)가 조선총독의 위촉으로 저술한 〈신사와 조선〉(神社と 朝鮮)에서, 신사의 본질과 참배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조선(祖先)은 조신(祖神)에 대한 열렬한 신앙을 그대로 황실존숭(皇室尊崇)위에 옮겼다. 씨족조신(氏族祖神)의 존숭은 바로 황실존숭에 귀일되었다. 이리하여 천황은 현인신(現人神)이 되었다. 이 국민적 감격, 국민적 신앙이 있어서 비로소 세계에 통하는 만세일계제제(萬歲一系帝制)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것을 종교라 칭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참으로 세계에 비류없는 위대한 종교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6]

여기서 국가 신도에 종교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무라가미 시케요

---

5) 한국기독교연구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Ⅱ』, 기독교문사, 1990, 338쪽.
6) 小山文雄, 『神社と 朝鮮』, 朝鮮佛教社, 1934, 13-14쪽.

시는 (村上重良)은 "19세기 중반에 성립된 근대 천황제(天皇制) 국가는 제정일치를 내걸고 천황의 종교적 권위를 부활시켜 신도와 불교를 분리를 강행하고 전 신사(全 神社)를 국가제사(國家祭祀)의 시설로서 일원적으로 재편성했다."고 말했으며, "천황의 조상신을 모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은 본종(本宗)으로서 전 신사(紳士)의 정점에 두었고 천황의 종교적 권위와 신사신도(神社神道)를 직결시키는 것을 통해 새로운 국교(國教) '국가신도(國家神道)'를 창출해냈다"[7]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신도의 종교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종교성' 파악을 위해서는 근대 천황제 국가의 종교정책이 시행되어 나온 과정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일본정부가 '신도 국교화정책'을 펴게 되자 이 정책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교(信教)의 자유'에 모순된다는 주장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자 정부는 국교화를 추진하였던 신도를 이른바 '국가신도'와 '교파신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천황의 종교적 권위와 직결된 '국가신도'를 초종교의 위치, 최고의 권위를 지닌 국가제사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신도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른바 '신사비종교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일제 말 신사참배 강요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기독교계에 대한 강압과 설득이 진행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신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8] 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신사 비종교론'과 이른바 '국민의례론'으로 여타의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이의제기와 반대를 제압하였다. 그러나 국민의례임을 강조하며 참배를 강요했던 국가신도가 엄밀히 볼 때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는 많은 것이다. 즉 천황은 '종교적 권위'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밝혀진다.

---

7) 村上重良, 『天皇制國家と 宗教』, 株式會社 講談社, 2007, 4쪽.
8)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1927, 507쪽.

우선 마츠야마(松山常次郎)는 일본정부의 국가신도의 종교성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정부는 이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입장에 있지만.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세신궁은 종교를 초월하는 종교로서 일본의 국민 된 자는 반드시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제국헌법에 명시된 신교자유의 정신과 모순되는 것이다.”[9]

츠라타미(貫民之助)도 신사의 종교적 성격을 분명하게 주장하며, 기독교인의 신앙기준으로 볼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은 옳다는 주장을 편다.

>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고 오늘날 정부에 의해 취급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사실상 종교적 신앙을 지니고 신사에 나가는 사실 등은 명백히 신사가 종교적 시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종교인 신사 예식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타인에게 강요하는 일은 당연히 신교자유의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리고 신교(信教) 자유의 헌법과 당착(撞着)되는 경우는 헌법을 따라야 함은 더할 논지가 없다. 따라서 종교적 신앙에 의해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곧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국체에 반하는 것이라는 말은 온당치 않은 말이다.[10]

이 논설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일본기독교계의 반응 중에 가장 신앙적 입장, 기독교적 입장에서 주장된 내용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신사참배 반대자들과 논리를 거의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신사의 역사와 참배의 형식 속에 포함된 종교적 의미는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상 상호 용납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 근거로서 제국헌법에 명기된 신교자유 조항을 들었는데, 신사참배가 신교자유와 상충될 때는 헌법에 명기된 신교자유를 따라야 한다는 적합한 논리를 적

9) 松山常次郎, “神社問題と 基督教”『特高月報』1938.8월호. 도서출판 고려서림, 1991, 117-118쪽.
10) 貫民之助, “神社參拜の 問題に 就て”『基督教週報』第65卷 8號, 1932.10.28.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 | 編,『日韓キリスと教關係史資料 II 1923-1945』, 新教出版社, 1995, 179-180쪽.

용시켰다.

박정신은 신사참배가 종교행위인 것을 다음과 같은 명쾌한 논리로 설명한다. 제정일치의 전통, 특히 신도의 우두머리 신이 일본을 아마테라우스 여신인 점, 일본의 천황은 사람의 옷을 입은 신의 후예로서 일본을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천황은 신이고 신사는 종교기관이며 이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는 종교행위라는 것이다. 신도라는 일본 종교가 천황제도와 '용해되어'(fused) 신사참배라는 종교의식이 국가의례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도와 천황제가 뗄래야 뗄 수 없이 결연되어 있고 용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특히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사참배 문제는 단순한 국가의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믿는바'의 문제, 다시 말하면 종교의 본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11]고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신사 비종교론'을 내세워, 국가가 신도의 제사를 종교로부터 분리하여, 실제로는 종교로서 기능하면서도 표면상 국가는 그것을 종교가 아니라 의례와 관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국가 제사를 천황에게 직속시킴으로써 천황이 정치적으로 종교를 장악하였던 신권적 천황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 신도의 종교성은 천황을 신성불가침의 현인신(現人神:ぁらひとがみ)으로 숭배하였던 점에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와 분리해 낸 제사와 의례를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강요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사 비교종교론을 통해 일본 정부는 신사를 일반 종교로부터 분리해 내어 일반 종교들보다 상위에 두는, 초월종교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12]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성이

11) 박정신, 「신사참배 반대운동-종교운동인가, 민족운동인가?」, 『기독교학 저널』, 제4권, 숭실대학교 기독대학 대학원 기독교학과 공동발행, 2007년 12월, 39-40쪽.

12) 안재익, 「메이지 시대 종교정책과 국가신도의 형성」, 『동양사학과 논문집』, 제32집, 서울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 교회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II. 신사 참배 강요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일본정부가 신사참배 강요를 수단으로 한, 한국의 기독교세력의 무력화 혹은 한국 교회의 '일본적 전향 정책'은 먼저 1932년과 1935년에 평양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가장 노골적으로 일본의 마각을 드러낸 것은 전조선인 황국신민화운동이 고조된 1938년 이후부터이다.

1932년 봄 소위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13]의 제례(祭禮)를 평양에서는 서기산(瑞氣山)위에 있는 충혼탑(忠魂塔)앞에서 치루었는데 이는 만주사변의 전몰장병(戰歿將兵)을 위한 위령제를 겸한 것으로 각급 학교의 참여를 명령하였다. 이때 기독교 학교 11개교는 만주사변에서 죽은 영혼을 달래는 제식에는 참가할 수 없다 하여 거부하였다. 다만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제례 후에 있는 국민의례에만 일부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것으로 총독부 측과 타협을 하였다.[14]

이때 신사참배는 거부하면서 국민의례에는 일부학생들을 참가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에는 당시 미국 북 장로교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소열도(T.S. Soltau) 선교사가 미국 북 장로교 선교본부 총무 마카휘이(McAfee)에게 보낸 당시의 상황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가 단지 애국적인 행사라고 선언했지만, 선교

학교 동양사학과, 2008, 276쪽.

13) 매년 봄과 가을, 춘분, 추분의 날에 전국의 신사에서 소위 황령(皇靈)에게 제사를 지냈다.

14) 〈기독신보〉, 1932년 12월 14일호 참조. 〈平壤基督敎學校 灵祭不參拜事件〉

> 부 소속 선교사들은 정부당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기념하면서 수행하는 신사참배는 아주 분명한 종교적인 요소들이 있으며, 주문을 읽고, 제물이 받쳐지며,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임재하고 떠나가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하는 것은 분명한 종교적인 요소들인 것이다.[15]

선교사들은 신사참배의 종교적인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신사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주장하며, 국민으로서 국가의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국민의례에만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의 일부대표 들만 참석하게 한다는 등의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1935년 11월 14일 평남 도청에서 개최된 도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회의에 참석한 교장들이 도지사가 개회 벽두에 평양신사에 참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숭실전문학교 교장 윤산온(맥큔, G.S. McCune,1873-1941)을 비롯한 기독교계 학교의 교장들은 기독교인의 교리와 양심상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맥큔은 신사 의식들은 종교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영들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신사참배가 사람의 양심을 더럽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일이며, 일본 제국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에도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16] 주장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 그

---

15) 소열도 선교사(J. S. Soltou)가 미국 북 장로교 선교국 총무 C. B. McAfee에게 보낸 1935년 6월 6일자 서신에는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Letter from T.S. Solutou to C.B. McAfee, June 6, 1935. 11-12쪽. 이만열 엮음,『신사참배 영문 자료집 Ⅱ』-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문서 편-,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11-12쪽.

16) Letter from G. S. McCune to N. Yasutake, December 13th, 1935, 이만열,『자료집 Ⅱ』, 39쪽.

리고 그는 1936년 평남 도지사에게 보낸 최후의 회신에서 신사참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1, 현재 행하는 신사의식들은 나에게는 분명히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2,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실제로 거기서 신령들을 예배한다고 믿기 때문에, 3, 기도교인들은 효도와 구별하여 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4,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기독교인들에게 그 같은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17]

윤산온에 있어서는 신사의식에 내재한 종교적 성격, 신령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조상숭배의 죄, 성서의 금지규정이 신사참배 불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가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는 신사참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신사참배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태도로 인하여 윤산온은 1936년 1월 20일에 숭실전문학교장 직에서 파면이 되었고, 1937년 10월 29일에 미 북장로교 선교회 본부는 폐교원을 제출하여 숭실전문, 숭실중학, 승의 여중 등이 폐교하기에 이른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 윤산온 즉 맥큔과는 달리, 서울에 있는 연희 전문학교교장 원한경(元漢京), 즉 호래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18]는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교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에 선다. 그는 숭실전문학교 교장 맥큔과 동일한 북 장로교 선교부 소속이었지만 신사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언더우드는 선교사들이 일본 당국의 "손님"이기에 일본법을 지키고 '일본 정부와 국민들 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19] '고 말하면서 일본정부의 신사참배 정책에 타협적인 태도를

17) Letter from G. S. McCune to N. Yasutake, January 18th, 1936, 이만열, 위 자료집, pp74.
18) 원한경(Underwood)은 언더우드의 아들로 1934년 이후부터 연희전문학교의교장으로 취임하였다.
19) Horace H. Underwood, "신사참배는 교리위반 아니다." 〈조선일보〉, 1938년 8월 16일.

취한다. 그는 신사참배가 외관상 종교의 색채가 보이지만 일본 당국이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고 선언해 왔고, 그리고 그 의식도 국가적 영웅을 기념하고 애국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예배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0]. 그러면서 만약 신사참배의 외적 특성으로 인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심리적인 갈등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도록 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생도 0명 및 교원 0명은 명일 00신사에서 의식에 참여한다." 언더우드의 생각은 일본정부가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했음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등의 종교적의미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21] 언더우드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할 경우에 기독교 학교의 폐쇄, 기독교학교 학생들의 비 기독교학교로의 전학 금지, 의료 및 선교 방면의 사업 중지, 정부당국으로부터의 압박, 조선 학부모와 학생들로 부터의 비난 등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언더우드가 일본정부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이었다. 즉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교회가 개입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었다.[22] 그러나 여기서 언더우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일본정부가 종교의 일에 간섭하고 종교를 압박하고 통제함으로서 얼마나 크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었는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교분리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원한경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충실하였다는 것은 그가 정교분리원칙을 따르는 자 같지만 사실은 정치의 종교지배를 인정

20) Letter From H. H. Underwood to McAfee, February 5. 1936. 이만열 엮음, 『자료집 II』, 94-95쪽.
21) 〈조선일보〉, 1938년 8월 16일, 윗글.
22) 김승태, "1930년대 기독교학교의 신사문제 소고", 『한국 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1, 385-389쪽.

하는 것이고 정교합일의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참배 반대자와 찬성자로 서로 견해를 달리했던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반대자와 찬성자로 나누어진다.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 평북 신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기철 목사,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상동 목사 등 소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이들은 연합하여 다음과 같은 신사참배 거부를 위한 실천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첫째 신사참배학교에는 자녀들을 입시키지 말 것, 둘째 신사 불참배 운동을 일으켜서 기성교회를 약체화내지 해체시킬 것, 셋째 신사 불참배 신도를 규합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육성하여 교회를 신설할 것. 넷째, 신사참배하는 목사의 세례를 거부할 것 등이다.[23]

이러한 기본 방안을 내걸고 신사불참배 운동을 목숨을 내걸고 전개하여 나간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 인사들은 신사참배가 국가의 의례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사참배를 행해왔으며, 특히 1938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평양의 서문밖교회 예배당에서 제27회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전국에서 각 노회의 총대들이 모여 교단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 하였다. 총회 이틀째인 9월 10일 평양노회장 박응률이 평양, 평서, 안주의 3개 노회를 대표하여, 신사참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을 설파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를 하여 제출했다.

>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또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참 뜻을 이해 할 뿐 아니라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따라서 솔선수범하여 신사참배를 하고 자진하여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함

23) 「이기선 목사외 20인 예심종결결정문 제15조」. 김승태 엮음, 『한국 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466쪽.

으로써 비상 시국하에서의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도록 한다.[24]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사참배를 종교행위로 보고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한 개인 선교사들과 선교회, 개 교회와 개인의 입장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한국 기독교 전체로 본다면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의 하나로 보고 신사참배운동에 적극 협력을 하였다. 당시 개신교를 대표하는 장로교회는 1938년 9월 제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참여하여 황국신민으로써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25] 이로써 장로교회는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38년 9월 총회는 장로교회가 일제에 결정적으로 굴복한 사건이다. 이후에 장로교회는 전적으로 국가를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신사참배 결의 이후 장로교회는 마치 터진 봇물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국가에 협조하는 길로 나갔다.

1939년 9월 총회 중에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궁성요배, 국가봉창, 황국신민서사제창으로 시작된 결성식은 로마서 13:1-7을 봉독하고 국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국책수행에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26] 총회장은 연맹의 이사장이 되고, 노회별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 지맹을 결성하고 각 교회는 애국반을 결성하였다.[27] 장로교회가 국민총동원 조선연맹의 산하조직이 되어버린 것이다. 교회의 모든 집회마다 국가의식을 먼저 행해야 했다. 교회의 모든 집회까지 국가를 위한 집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후 장로교회는 교

24) 『朝鮮 耶蘇敎 長老會 總會 第 27回 會議錄』, 9쪽.
25) 윗글.
26) 『朝鮮 耶蘇敎 長老會 總會 第 28回 會議錄』, 16-17쪽.
27) 지맹장은 노회장이 맡고, 이사는 각 교회의 당회장이 맡았으며, 또한 각 교회의 당회장은 애국반장을 당회원은 애국반 위원을 맡았으며, 집사는 평위원이 되었다. 정태식,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종교정책에 대한 일 고찰-대구 경북지역 기독교 관련 공문서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78집, 2005년 2월, 165쪽.

회라기보다는 일제정부의 한 조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꼬리글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사참배는 신도의 핵심사상인 황제이데올로기를 구심점으로 한 사상이므로 처음부터 종교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 선진국들과의 외교관계에서, 국가가 종교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통제하고 타종교를 억압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중간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교파신도와 국가신도를 구분하여 종교성을 감추려고 했으며, 신사참배는 국가에 애국충정을 나타내는 국가 의례임을 강조했지만, 국가신도 자체가 종교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기독교들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처음부터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사참배의 국민의례임을 선전해왔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거듭 거듭 설득함으로써, 소수의 신사참배 반대파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조선의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오다가 결국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솔선하여 총회의 임원들이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조선의 교회는 역사속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를테면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신사참배 결의를 한 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사무관 하야시(森浩)는 “사변하에서의 기독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 기운을 타고 이 파도를 타서 해결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의에 적당하며, 또한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시국 하에 기독교의 나아갈 길은 이미 분명해 지고 있다. 교도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지체하거나 의심함이 없이 나아갈 뿐이다. ‘자물쇠가 열린 문

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28] 고 말했다. 하야시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는 일본정부가 신사참배 가결이후에 어떻게 조선의 기독교를 정부에 예속시키고 정부의 정책 시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말이다. 신사참배는 그동안 포교규칙과, 사립학교 규칙 등, 기독교 통제 정책을 통해서 서서히 기독교를 길들여 오던 일본정부가 이제는 조선의 기독교를 완전히 국가기관으로 복속시켜 전시체제에 일본의 정책수행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조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조선의 기독교에 대한 의도는 총회 전후의 조선기독교연합회 대회에서 미나미(南次郎) 총독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미나미는 1938년 7월 7일 조선기독교 연합회 대회 축사에서, 교회에 진흥에 힘써야 할 일은 '우리 국체의 본의에 철저하고 일본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29]하였고, 1939년 6월 3일, 전국신도대회의 축사에서는 '종교선포의 방책의 근본은 국체를 배양하여 국가의 진전에 공헌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30] 하였고, 1939년 7월 8일 조선기독교연합회 제2회 총회의 총독 고사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전파하는 국가의 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31]

일본정부는 조선의 기독교 안에는 조선 민족주의자들이 상존해 왔으며, 기독교가 종교상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정치적 문제에 관여 해왔다고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선의 기독교를 완전히 민족주의와 결별시켜서, 독립운동과 같은 정치적인 활동에서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더 나가서는 기독교를 정부의 정책수행을 돕는 하수인이 되고 선전자로 만들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

28) 朝鮮總督府, 『朝鮮』, 1938年 11月號, 70-71쪽.
29)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編, 『諭告 訓示 演說總攬』, 朝鮮行政學會, 1941, 706쪽.
30) 윗글, 709쪽.
31) 윗글, 710쪽.

를 탄압했고, 정부가 종교를 완전히 복속시킴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이다.

신사참배가 명백한 종교행위요 우상숭배임이 드러났는데도, 일본정부는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의 기독교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놓고 신사 참배를 강요해서 기독교를 일본정부에 예속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정교분리 원칙이, 강압적인 일제하에서는 종교의 국가 예속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Arthur Judson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19)

G. T. Brown, *Mission to Korea*, (Seoul: Board World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 1962)

Y. H. Kim. "The Protestant Church in Chosen." *The Korean Mission Field*. vol.34 no.6 (June 1938)

Letter from T.S. Solutou to C.B. McAfee, June 6, 1935. 이만열 엮음,『신사참배 영문 자료집 Ⅱ』-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문서 편- (서울: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Letter from G. S. McCune to N. Yasutake, December 13th, 1935.

Letter from G. S. McCune to N. Yasutake, January 18th, 1936.

Letter From H. H. Underwood to McAfee, February 5. 1936.

小山文雄,『神社と 朝鮮』(京城: 朝鮮佛教社, 1934).

村上重良,『天皇制國家と 宗教』(東京: 株式會社 講談社, 2007).

高橋濱吉,『朝鮮教育史考』(京城: 帝國地方行政學會, 1927).

松山常次郎,"神社問題と 基督教"『特高月報』, 1938.8월호. (서울: 도서출판 고려서림, 1991).

貫民之助,"神社參拜の 問題に 就て"『基督教週報』第65卷 8號, 1932.10.28.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 | 編,『日韓キリスと教關係史資料 Ⅱ 1923-1945』(東京: 新教出版社, 1995).

渡部學, 阿部洋 編,『日本植民地教育資料集成』第69卷, (東京: 龍溪書舍,1991), 김승태 편,『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기독교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910-1945년.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編『諭告訓示演說總攬』, (朝鮮行政學會, 1941).

朝鮮總督府,『朝鮮』, 1938年 11月號,

『朝鮮 耶蘇教 長老會總會 第27回 會議錄』

『朝鮮 耶蘇敎 長老會 總會 第 28回 會議錄』

한국기독교연구소 편,『한국 기독교의 역사』Ⅱ(서울: 기독교문사, 1990).

김승태,「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신사(神社)」,『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79호. (서울: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_____,「이기선 목사 외 20인 예심종결결정문 제15조」,『한국 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1991).

_____,「1930년대 기독교학교의 신사문제 소고」,『한국 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서울: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1991).

박정신,「신사참배 반대운동-종교운동인가, 민족운동인가?」,『기독교학 저널』제 4권, 숭실대학교 기독대학 대학원 기독교학과 공동발행, 2007년 12월.

손정목,「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정책연구」,『한국사 연구 제58호』(서울: 한국사 연구회, 1998).

안재익,「메이지 시대 종교정책과 국가신도의 형성」,『동양사학과 논문집』, 제32집, (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2008).

정태식,「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종교정책에 대한 일 고찰-대구 경북지역 기독교 관련공문서를 중심으로-」,『대구사학』, 78집, 2005년 2월.

기독신보, 1932년 12월 14일〈平壤基督敎學校 灵祭不參拜事件〉

조선일보, 1938년 8월 16일〈신사참배는 교리위반 아니다.〉

〈Abstract〉

A Study of religious character of the Japanese Shinto Shrine Worship

Park, Tae-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religious character of the Shinto Shrine Worship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ompelled to Koreans in the period occupied by force of Japanese Empire around the end of 1930's.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compelled the Shinto Shrine Worship, a Korean church was divided by refusing and agreeing sides. In the side of refusing the Shinto Shrine Worship, the Japanese national Shinto Shrine was religious, and it was a standpoint refusing as the Shinto Shrine Worship corresponded to idol worship, and agreed side was a standpoint agreed there was no problem to Christian belief to see the Shinto Shrine Worship as national ritual. This researcher insists upon that it is right selection in front of history that American missionary G.S. McCune refused the Shinto Shrine Worship and former Soongsil school was closed down. In 1938 September, it is wrong in front of history that the 27th Korean Presbyterian Assembly approved to adore the Shinto Shrine, also Korean Church had worshipped to Shinto Shrine. And in this paper, It is to clarify the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ompelled the Shinto Shrine Worship to Korean church had suppressed the freedom of religion that was the natural rights of man, and damag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ecause the Shinto Shrine Worship had religious character.

Key Words: Shinto Worship, Freedom of Religion,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nationalistic movement